

## 오피니언

## 월/요/광/장

김영용



12·19 대선을 앞둔 후보자들의 복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력한 세 후보가 대체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당선 후 실제로 잘 굴려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경제의 원활한 운행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 기능이란 수요와 공급의 변동 상황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정보 전달 기능,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참여자들이 행동을 조정하도록 하는 유인 제공 기능, 그리고 각자가 소유하는 생산 요소에 따라 소득을 얻게 하는 소득 분배 기능의 세 가지다.

복지 정책은 가격의 소득 분배 기능을 다른 두 기능과 분리하여 정부가 시장에서 이뤄진 소득 분배를 좀 더 고르게 하고, 저소득층을 돋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 분배 기능은 정부가 하고, 다른 두 기능은 가격이 하도록 하면 세 기능은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자신이 가지지 못한다면 가격 정보에 반응하여 행동을 조정하는 유인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주의자들은 흔히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한다”는 명제를 거스르

## 복지정책, 잘 굴려가게 하려면

는 오류를 범한다. 또 복지정책이 일단 도입되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속성을 가진다. 민주사회에서 복지 수혜자들도 모두 투표권을 가지므로 지출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 지출의 확대와 일할 유인의 감소는 국가 재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복지 지출 증대→일할 유인 감소→생산 감소→소득 감소→재정 수입 감소→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지 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은

1870년 세계경제의 0.6%, 1950년대에는 0.9%를 차지했다. 그러나 1950년대 복지 국가를 선언하면서 2000년대에는 0.5%로 떨어졌다. 복지 지출의 증가와 과도한 세금이 원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이전에 따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복지 지출은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그리스의 젊은 세대들이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은 복지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고 복지정책을 전혀 실시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정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며,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복지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한하는 것이다. 즉 성별, 나이, 계층 등과는 무관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돋는 것이다. 노동력이 없거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소한의 생활도 하기 어려운 노인과 청소년 가장 등의 가난한 가계

들이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12·19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보면 온통 장미 빛이다. 재원 마련책도 궁하기 짜이 없다. 부자 증세를 들먹이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과세 대상 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꾸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한다.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은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한다.

한국은 이제 1인당 소득 2만 불을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 시점에 복지의 높에 빠진다면 한국경제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나눠주기식의 복지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복지 지출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며, 항구적으로 굽려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 시 약속했던 복지 공약에 대해 사과한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당장의 사랑방법에 현혹되지 말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긴 안목으로 각 후보의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전남대 교수·경제학〉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나라 사람은 대충, 그리고 즐겁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중도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할무라비 법전(BC 1750년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이라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법전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뺨을 맞았을 뿐인데 힘만 있으면 상대방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무한 복수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함무리비 음이 만든 것이다.

그 내용 중 일부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쳐서는 안 되며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정의가 온 땅에 온전히 드러나며, 흥망이 그치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기 위해 법을 돌관에 적어 세우는 것”이라는 부분에 눈길이 간다.

# 요즘 들어서는 “세상살이는 나그네처럼, 벼슬살이는 손님처럼(在世如旅, 在官如賓)”이라는 경구가 마음에 든다.

〈광주지방법원·광주기정법원 순천지원장〉

원도 토목공사를 마치고 잔디 식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다.

정원박람회장 조성으로 순천시는 창의 인성체험(힐스테이트, 다도체험)과 생태체험(순천만 철새, 생물관찰 등), 역사 및 안보체험(왜성, 겉단산성, 31사단)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청소년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학생들의 수학여행으로 대한민국 최고 생태체험장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1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700억 원의 부가가치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박람회를 전후로 1만1000여 개의 일자리도 생긴다. 이와 함께 남해안권의 조경·화훼·뷰티·한방산업 등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환기가 될 수 있다.

정원박람회는 많은 의의를 지닌다. 생태 숲을 통해 도심평화를 막아주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저지대 침수를 예방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가 국제적 생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를 꿈꾸는 박람회로 이제 시작점에 있다.

세계인들에게 생태와 자연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완벽하게 성공의 희망은 확실하다고 본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더욱 긍상침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사무총장〉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시설

## 비엔날레 ‘스쳐가는 미술쇼’ 안되려면

아시아의 대표 미술축제인 제9회 광주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일 막을 내렸다.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리운드 테이블(Round Table)’을 주제로 아시아 여성감독 6명이 공동기획하는 등 아시아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비엔날레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넘버 1’ 디운 차별화된 시도였다는 평이다.

제다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인프라로서 지역의 문화지형을 넓혀왔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매번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프로그램과 관광마케팅 개발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비엔날레=스쳐가는 미술쇼’라는 말이 나와겠는가.

제단은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지키되 대중들과 교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아무리 국제적인 축제로 명성을 얻더라도 지역민들이 외면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 해도 너무한 이명박 정권의 호남인사 훌대

영남 4, 수도권·충청 3’이라는 나름의 원칙이 지켜졌지만 이 정권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인사 쟁이’인 셈이다.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혁신사업도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J프로젝트가 수년째 방치되고, F1 대회도 지원은커녕 발목을 잡는 등 소외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남에 무려 17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들이 집중된 반면 호남은 그 5분의 1 수준인 3조4000억 원대에 불과하다니 분노마저 치민다.

현재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총경 45명 가운데 경무관 심경은 그야말로 허탈하다. 인사는 물론 각종 국책사업에서 이 정권의 호남 훌대가 도를 넘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혁신사업도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J프로젝트가 수년째 방치되고, F1 대회도 지원은커녕 발목을 잡는 등 소외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남에 무려 17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들이 집중된 반면 호남은 그 5분의 1 수준인 3조4000억 원대에 불과하다니 분노마저 치민다.

호남 훌대는 현 정권이 정책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와 공생발전과도 정면 배치된다.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편중해서는 소통과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실패’로 낙인 찍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호남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훌대를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 無等鼓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도 마찬가지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19세기에는 현대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제2의 불’ 전기에너지가 실용화됐다. 이로써 밤과 낮 구분이 없

는 24시간 문화가 형성됐고 실내와 실외, 지상과 지하 구분 없이 행동 반경을 넓혔다.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지구촌’을 가능하게 했다.

20세기 들어서는 ‘제3의 불’로 밝혔다. 원자력 반응을 인위적으로 인간은 자연을 제어하며 전란한 문화를 꽂았었다.

현재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총경 45명 가운데 경무관 심경은 그야말로 허탈하다. 인사는 물론 각종 국책사업에서 이 정권의 호남 훌대가 도를 넘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혁신사업도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J프로젝트가 수년째 방치되고, F1 대회도 지원은커녕 발목을 잡는 등 소외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남에 무려 17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들이 집중된 반면 호남은 그 5분의 1 수준인 3조4000억 원대에 불과하다니 분노마저 치민다.

호남 훌대는 현 정권이 정책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와 공생발전과도 정면 배치된다.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편중해서는 소통과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실패’로 낙인 찍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호남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훌대를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원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구두선(口頭禪)일 뿐이다. 가동 중인 요구나 대선 공약으로 ‘원전 폐쇄’까지 제시되면 온 구역에 핵무장을 불러와 생명의 죄악을 멀뚱시킬 위험도 있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영광에도 6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은커녕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잦은 고장과 납품비리에 이어 최근 10년이나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고 3호기의 경우 제어봉

안내판 균열을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원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구두선(口頭禪)일 뿐이다. 가동 중인 요구나 대선 공약으로 ‘원전 폐쇄’까지 제시되면 온 구역에 핵무장을 불러와 생명의 죄악을 멀뚱시킬 위험도 있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광주일보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062-221-2200-551 | 062-227-9600

편집국내 |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면 접 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 체 룹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 전 신 팀 2200-68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 문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5

기획 사 암 국 2200-555 | 〈F A X 02-773-9335〉

경우 2200-510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